

비정규직 집단 해고가 정의선식 공정시스템?

현대차, 하청 계약 해지·성과금 삭감 ... 금속노조 “말뿐인 현대차 원하청 상생”

현대차 원청이 수출 선적하는 1차 하청 업체에 고용승계 없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정규직 집단 해고에 성과금 삭감 문제까지 겹쳐 현대차·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 해고를 규탄하고, 현대차 원청에 상생협력금 삭감과 차등 지급을 중단하라 촉구했다.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에 따르면 현대차 원청이 1차 사내하도급 업체인 이수기업에 9월 30일 도급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고용승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수기업 노동자 39명이 꿈쩍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수출선적부 차량 이송 업무를 해왔다.

이수기업 소속 안미숙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업체 계약 해지 과정을 설명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미숙 조합원은 “대법원



이 이수기업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사용을 인정하자 현대차 원청이 우리를 완전히 지우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현대차 원청은 이수기업에 6월 30일까지 도급계약을 유지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통폐합하겠다고 통보했고, 5월에는 이수기업과의 계약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원청 노사 임금·단체교섭 기간에 업체 폐업 문제로 현장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보였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5월 30일 대

법원이 이수기업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었다. 7월 현대차 원청은 이수기업 사측에 “통폐합이나 계약 연장 없이 9월 30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고용승계, 전환 배치는 없다” 라고 알렸다.

안미숙 조합원은 “이수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대차 원청은 불법파견 범망을 피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른 1차 하청 업체 노동자들도 내쫓으려 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안 조합원은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잘리지 않고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 해고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함께 싸워달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국 양궁 신화는 공정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봤다”라며 입을 뗐다. 허원 부위원장은 “공정성을 앞세우는 정의선 회장에게 이번 이수기업 계약 해지를 묻고 싶다”라며 “갑자기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는 현대차 원청은 과연 공정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원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현대차 공장에 무슨 공정 시스템이 있겠냐. 현대차의 공정과 원하청 상생은 말뿐”이라며 “현대차 원청의 불공정과 불합리에 맞서 당당히 싸우자.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집단 해고를 막겠다”라고 밝혔다.

사내하청 상생협력금 차별 지급

비정규직 성과금 삭감 문제도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년 가까이 성과금 명목으로 상생협력금을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상생협력금의 80% 수준이다. 올해 들어 현대차 원청이 상생협력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줄였다. 정규직 성과금의 47%에도 못 미친다. 김광수 노조 전 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상생협력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원청은 지급 대상 등 상생협력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며 “이대로라면 상생협력금은 더 줄어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 원청을 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 성과급 차등 지급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성과급 배분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남양 비정규직지회, 기아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 울산·전주·경기지회, 현대자동차 보안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함께 했다. 이들은 현대차 역대급 실적에도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이제 목줄까지 끊으려 한다며 분노했다. 현대차 원청의 비정규직 집단 해고와 차별 대우를 막는 데 힘모으자며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